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현 근무지 보장...“세부안 마련”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 당론 발의 “공무원 불이익 배제 원칙·거주 이전비 지원” 신규채용·승진인사 마련...행안부지원단 구성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제도적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통합 이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공무원 근무지와 인사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 근무지 보장과 불이익 배제 원칙을 법 조문에 명시하고, 근무지 변경 시 이주·정착 지원까지 포함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정부도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통합 이후 인사·조직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착수해 설 연휴 이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통합 자치단체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근무지 문제를 원칙 수준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간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은 통합 이후 광역 행정조직 재편 과정에서 근무지가 강제로 변경되거나, 승진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아 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직접 겨냥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 제110조에는 통합으로 인해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 근무지와 관련해 “특별시 출범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논란이 컸던 고위직 인사 운영도 한층 명확해졌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강제적 근무지 이동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무원단체가 요구해 온 ‘불이익 배제 원칙’을 법률 문구로 분명히 한 셈이다.

근무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법안에는 이 사비 실비 지원과 한시적 이주지원비 지급을 비롯해 자녀 학업, 출산·양육 지원,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환급, 교통·복지·문화·교육 여건 개선 등 정주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통합 이후 공무원이 생활 기반을 옮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인사 안정과 함께 통합 행정조직에 맞는 신규 채용과 승진 체계도 정부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제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상태다.

광주시는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 담당

인력을 지원단에 파견해 기존 인사 규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원단은 향후 통합 자치단체 출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근무지 운영 원칙과 신규 채용 방식, 승진 구조 등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률에 담긴 원칙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제도 설계 못지않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할 공무원들의 수용성과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유 헌정사 첫 대법원장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행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호 고법판사)는 지난 30일 직권판용 등 혐의의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환(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면 ‘행정통합’서 계속

때문에 이 같은 사항을 특별법에 모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특례를 통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건철 전 전남연구원장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은 지역발전의 전향점이다. AI 인재 등을 갖춘 광주는 내륙도시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목포와 광양 등은 AI·에너지 산업을 위한 풍부한 자원에 비해 인재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과 광주가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반도 서남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서남권에 AI·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에 최우선으로 집중을 해,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무형의 먹거리 산업의 허브인 관광, 동일 생활권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1면 ‘특별법 발의’서 계속

총액인건비 규제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법적으로 보장했고,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기업 유치 등을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이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 회 동의를 2월 임시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곡성군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곡성군 도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예타 대상 선정

1조2000억 규모...나주 왕곡면에 2036년까지 인프라 조성

전남도와 나주시가 역점 추진해 온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나주시 왕곡면 일원(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 일점) 103만㎡ 부지에 전역 국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연구시설과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나주시, 켄텍과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켄텍 내에 초전도체 시험설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감도

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열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오는 8월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야생멧돼지 포획

전남도, 9일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610명 투입

전남도는 영광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지역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610명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전남도와 시군이 협력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인위적 전파 요인 차단

준행동지침(SOP)에 따라 △포획 전·후 현장 차량 소독 △포획 후 환복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시 전용화 착용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등 ‘수렴인 5대 방역지침’의 철저한 이행하도록 시군과 피해방지단원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집중포획 과정에서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광조끼·야광밴드 착용 △수렴인 5대 방역지침 등 안전교육 실시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중포획과 함께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상시 예찰과 현장 대응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통합 특별법 발의 시도지사 반응

강기정 “부강한 광주전남 만드는 첫걸음”

재정 특례조항 미반영 아쉬움...끝까지 노력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부강한 전남광주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다”

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많은 기관 유치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김영록 “320만 시도민과 뜨겁게 환영”

국회 심의서 추가보안 사항 반영 운힘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발의로 광주·전남 대통합과 대부흥의 역사적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320만 시도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력과 지원이 시도민의 단합된 힘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며 “통합 추진 선언 이후 찬성 여론이 급물

살을 타면서 한 달 만에 법안을 제출토록 밀어주고 지혜를 모아준 전남·광주 시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 새로운 정책 대안들, 정부와의 협의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총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문체부·농림부 등 전남광주특별시 이전 빠졌다

농협중앙회도...‘부처 이전 없다’ 정부 기류 등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 일부 특별시 이전 요구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된 특별법 최종안에는 중앙부처와 주요 공공·준공공기관의 특별시 이전을 명시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부 검토하던 특별법 안의 가장 최근 수정본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농업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문체부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 요구가 논의됐었다.

정부 기류도 사세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특별법 법안에 문체부 등 이전 요구가 담겼다는 보도가 나가자, 설명자료를 내고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방 이전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하고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 논란 소지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